예고된 평행선 '도청별관 해법' TV토론

"일부라도 존치땐 설계 훼손" "5월의 문 외에는 대안 없다"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TV합동토론회가 4일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별관논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규승 문화전당 설계자,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사회자, 허연식 5·18유족회 전문위원,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TV 합동토론회가 지난 4일 열렸지만 5월 단체들의 '오월의 문' 안과 추진단의 별관철거 방침이 팽팽히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화전당 설계자 우규승씨는 대안으로 5·18 광주항쟁의 모든 유적을 보존한다는 별관원형 존치의 관점에서 벗어나 별관에서 목숨을 잃은 개인들을 따로 기리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광주MBC 공개홀에서는 '별관의 역사성 어떻게 살릴까'를 주제로 방송 3사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는 5·18단체가 추천한 허연식 5·18유족회 전문위원,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문화관광부가 추천한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 우규승 씨가 참여했다.

◇'오월의 문' 공방=이날 토론회는 최근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별관 일부 보존', '오월의 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주의 12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차례 회의 끝에 '오월의 문'(별관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안)과 '별관 3분의 1 이상 존치'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었다.

정부 대표들은 시민단체의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병훈 단장은 "절충안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별관 논란의 매듭을 짓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시민단체가 내놓은 절충안은 최근에 나온 내용도 아니고 지난해 5·18단체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두 논의, 검토된 것이다"며 "별관을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을 따진다면 원형보존보다 못한 안이다"고 주장했다.

설계자인 우규승씨는 "별관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문화전당의 대부분 건물이 지하에 배치됐다. 별관을 존치하면 그런 설계개념이 훼손된다"며 "별관은 열린 공간 사이에 벽을 형성하게 된다. 일부 절단된 별관은 보존할 경우 오히려 이상한 건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평우 위원장은 "도청별관이 문화전당 설계지침에서 빠진 것은 결국 5월 정신을 모두 담지 못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며 "도청 별관이 지닌 역사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 사적지로서 별관을 보는 시각에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허연식 위원은 "도청은 본관과 별관으로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추진단이 5·18 정신을 설계안에 제대로 담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별관 보존이 문화전당 조성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5·18 정신의 역사성을 보존하되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없는 팽팽한 '설전'=이병훈 단장은 "5월의 정신을 보존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자는 게 문화전당인데 1년 여 동안 논란을 벌이면서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며 별관철거 입장을 밝혔다.

황평우 위원장은 "5월 단체, 시민단체들이 뼈를 갉는 심정으로 마련한 '5월의 문 대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형보존 밖에 없다"며 "절집에서도 일주문을 세워놓고 공간과 공간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전당 설계에서 별관이 빠져 5월 정신을 담지 못한 만큼 우규승 설계자가 지금이라도 건축주(추진단)에게 요청해 설계변경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규승 설계자는 "5·18 광주항쟁에 대한 집단기억과 개인에 대한 기억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청 별관에서 숨진 분들, 개인을 기리는 월남전 기념비 같은 상징물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방송 합동토론회에는 6일 밤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검장 잇단 퇴진…대규모 물갈이 예고

천 내정자 취임 앞두고 13~14기 7명 승진할 듯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검장과 김준규 대전고검장(11기)이 3일 잇따라 퇴임하면서 13일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있을 고검장 승진인사가 검찰 내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성우(11기) 대검차장도 인사청문회 직후 사퇴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고검장급 인사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성관 내정자의 총장 취임 때까지 빈자리로 남을 고검장급 직위가 최소 4개에서 최대 9개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확실히 공석이 된 고검장 자리는 천 내정자가 맡은 서울중앙지검장직을 포함해 모두 4개다. 여기에 천 내정자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10기와 11기 3명이 용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사임한다면 7명의 고검장 승진 요인이 생긴다.

고검장 승진 폭의 최대 변수는 천 내정자와 동기인 12기 출신 2명(이귀남 법무차관, 이준보 대구고검장)의 거취인데 2005년 정상명 총장 취임 때 동기 3명이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에 남은 것처럼 이들도 잔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편이다. 이들이 떠나면 고검장 9자리가 모두 교체된다.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7기부터 기수당 4명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던 전례에 비춰보면 12기인 김종인 서울동부지검장, 김수민 인천지검장 중 1명이 고검장에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예상을 깬 천 내정자의 총장 지명이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면 12기를 건너뛰고 13, 14기에서 3~4명씩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13기 가운데 한상대(50·서울) 법무부 검찰국장, 황희철(52·광주) 서울남부지검장, 정진영(50·대구) 서울서부지검장, 차동민(50·경기) 수원지검장, 박용석(54·대구) 부산지검장, 조근호(50·부산) 서울북부지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14기에서는 김홍일(53·충남)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노환균(52·경북) 대검 공안부장, 안창호(52·대전) 대전지검장, 김영한(52·경북) 청주지검장, 채동욱(50·서울) 법무부 법무실장, 박기준(50·경남) 의정부지검장 등이 세평에 오른다.

이번 고검장 승진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대검 중수부 기능의 약화로 부정·부패사건을 떠맡을 것으로 점쳐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총장을 근접거리에서 보필하며 검찰의 안방살림을 책임질 대검차장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다. /연합뉴스

정부 녹색투자촉진책 발표

장기투자 4단계 맞춤지원 불확실성 줄여 민자 유도

인증제 도입 세제 혜택 보증 늘리고 펀드 조성 녹색 예금·채권도 발행

정부가 5일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책은 녹색 기술과 기업에 투자자금이 흘러가도록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확실성 투성이에 장기 투자 위주인 녹색 산업의 특성에 비춰 시장 기능에만 매달리면 충분한 자금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도 투입하지만 녹색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민간자금의 유입을 이끌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녹색인증제 도입, 녹색SOC도 민자사업 대상=정부는 먼저 적절한 투자 대상을 가려주기로 했다. 불확실성을 낮춰 믿을만한 투자후보군을 골라주면서 머뭇거리는 시중 자금에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특정 기술과 사업이 진짜 녹색인지를 선별해주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된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준다.

'핵심 녹색산업'도 선정한다. 상용화 단계이거나 2~3년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출품목이 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클 경우가 우선 대상이다. 하이브리드차와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녹색 사회간접자본(SOC)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사업 대상에 넣었다. 자전거도로 같은 비수익시설은 임대형(BTL)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수익시설은 수익형(BTO)으로 한다. 현행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이산화탄소 저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가한다.

◇R&D-상용화-성장-성숙 단계별 맞춤 지원=녹색산업에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은 4단계로 나눠졌다.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재정과 민간자본의 공조가 이뤄진다.

우선 녹색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이 올해 2조 원에서 2013년 2조8천억 원으로 늘린다.

상용화에 접어들면 모태펀드를 활용한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조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2조8천억 원인 녹색기업과 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도 2013년에는 7조 원까지 늘린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 규모도 현재 1천300억 원에서 2013년에 6천600억 원으로 키운다.

◇녹색 장기예금 나오고 공공탄소펀드 출범=녹색 장기예금이 나오고 녹색채권도 발행된다.

녹색 장기예금의 경우 5년 만기, 가입한도 2천만 원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적용하되 장단기 금리차를 보전하고자 이자소득에 세금을 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비과세를 감안하더라도 이자가 적을 수 있어 돈이 몰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녹색 채권은 3년이나 5년 만기에 3천만원 한도로 매수할 수 있다. 산은이 우선 발행하고 일반은행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 설비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활성화된다.

오는 10월에는 수출입은행이 15%,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85%를 집어넣어 1천억 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녹색 투자 실적을 감안한 '녹색사회적 책임투자 지수'를 만들고 우수기업을 '녹색 리그테이블'로 공표해 각종 혜택을 준다.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행거리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연내에 요일제 차량에 시범 적용한 뒤 2012년 이후 본격화하기로 했다.

녹색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연평균 30% 늘려 2013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신용공여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합뉴스